

미국은 왜 ‘펜스-김여정 회담 불발’ 공개했나

“北, 회담 2시간 직전 취소”
WP, 백악관 확인 형식 보도
北에 책임 떠넘기기 의도인듯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끈 평창동계올림픽 미 고위급 대표단이 북한과의 회담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 북한의 취소로 불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향후 대북정책이 투트랙, 즉 ‘최고의 압박과 관여’로 갈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펜스 부통령이 귀국하면서 북한과의 ‘탐색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창 체재 기간 행보를 놓고 미국 내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백악관이 평창 뒷이야기를 풀어 일종의 ‘물타기’를 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 일행은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하기로 물밑에서 성사됐지만 북한 측이 2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는 것이다.

또 이 만남을 한국 정부가 주재했다는 게 WP의 보도다.

백악관은 북한 측과의 회담이 협상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탐색 대화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가 의제이자 목표라는 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펜스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보고 있는 김여정(왼쪽) 부부장과 펜스 부통령.

부통령은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었고, 이 만남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감소할 기회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이 이 기회를 잡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외교가의 한 인사는 우리 정부가 평창에서 양측의 만남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불발’됐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부가 이처럼 기밀급인 ‘평창 전담’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그의 평창 초강경 행보에 대한 미 주류 매체들의 잇단 비판 보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펜스 부통령의 한국 행보를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재와 선제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올림픽에 배치했다. 바로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이다”(블룸버그), “북한은 이미 올림픽에서 승리를 거뒀다. 스포츠 부문이 아니라 홍보 금메달을 땀다”(CNN),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매력을 발휘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챘다”(뉴욕타임스) 등의 보도가 이어졌다.

펜스 부통령이 11일 귀국 전용기에서 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겠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하겠다”며 탐색 대화를 시사한 것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유력 인터넷매체 약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책을 북한에 설명할 대화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면서 탐색 대화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대북 대화 제의를 했다.

다만 그는 “대화가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의 의중을 탐색하고 미 정부의 ‘비핵화’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 정부의 입장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비록 WP가 북한과의 회담 성사 직전 불발을 보도하고 이를 백악관과 국무부가 확인하는 형식이었지만 미국 측으로서는 대화를 견어한 것은 북한이며, 미 행정부는 대화와 압박 어느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북미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핵심 의제와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가 최종적으로 불발될 경우 그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는 효과를 겨냥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북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가령 대화 결렬 이후 북미 간 최악의 긴장 관계가 다시 조성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이 명분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안보리 회의 참석한 트럼프 만사위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앞줄 왼쪽)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만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뒷줄 오른쪽) 백악관 선임 고문이 듣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이 중재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강조하고 “대화를 위해 쫓아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리아군, 반군지역 폭격 최소 250명 사망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반군 지역인 동(東) 구타가 시리아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공습과 포탄 공격을 받으면서 알레포처럼 대재앙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 40만 명이 시리아군의 봉쇄에 갇힌 동구타의 병원 시설 대부분도 대대적인 공습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다.

21일 알자지라 방송과 BBC,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20일 기간 시리아군은 전투기와 헬기, 박격포 등을 동원해 반군이 장악한 동구타를 맹공격했다.

전례가 없을 정도의 공격으로 이틀간 동구타에서 어린이 58명을 포함해 민간인 최소 250명이 숨졌다고 시리아인권 관측소는 추정했다. 이를 연속 100명 넘는 민간인 희생자가 나온 것이다.

이는 시리아에서 2013년 이후 이들 동안 발생한 최악의 인명 피해다.

또 지금까지 동구타에서 약 1200명이 부상했고 이 중 수백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지 활동가들은 동구타 전역에서 적

어도 10개 타운과 마을이 폭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리아군 전투기들은 동구타 상공을 비행하며 반군과 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고 쏠 새 없이 폭탄을 떨어뜨렸다.

동구타의 한 주민은 “미사일이 비처럼 떨어졌다”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영국 BBC에 말했다.

이로 인해 동구타에 있는 병원 6곳이 타격을 받았고 이 중 3곳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유엔은 밝혔다.

동구타에서 활동하는 현지 의료진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의료구호기구연합(UOSSM) 직원 제운 알조아비는 “몇 달간 의약품과 의료 물자가 이 지역으로 반입이 막혔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동구타에서 빵과 쌀과 같은 기본적인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물기도 급등하는 등 주민들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시리아 정부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그 지역을 해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거세지는 美 총기규제 여론 총기법 강화 찬성률 66%

총기의 구입과 소지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쿨피에대학의 조사에서 66%의 지지를 얻었다.

2년여 전인 2015년 12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찬성한 것에 비교하면 19%포인트 뛰어나는 것이라고 대학 측이 밝혔다.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의 총기 참사 등 반발하는 총기 사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쿨피에대학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249명을 상대로 이번 사건 직후인 16~19일 벌인 여론조사(표본오차 ±3.4%포인트)에서 총기법 강화에 대한 찬성률이 66%를 기록한 반면 반대율은 31%에 그쳤다.

특히, 총기 소지자들 사이에서도 50%가 찬성했고, 44%가 반대했다.

연합뉴스

자동연사 개조 안돼...트럼프 총기 ‘짚쑈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처럼 발사하도록 하는 장치를 금지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CBS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유기 있는’ 공공안전 관련 공무원 12명에게 메달을 수여하던 자리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관련 장비에 대한 규제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4일 플로리다 파크랜드 소재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17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로 규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합법적인 무기를 기관총으로 바꿔주는 모든 장치를 금지하는 규제를 마련하도록 한 행정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

다. 이 행정각서는 몇 달 전에 서명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를 명령한 대표적인 장치는 지난해 10월 미 역사상 가장 많은 58명의 사망자를 낳은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덕이 사용한 ‘범프 스탱’(bump-stock)이다.

범프 스탱이란 반자동 소총을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착 장치다. 실제로 반자동 소총에 범프 스탱을 결합하면 방아쇠를 누르거나 있어도 1분당 400~800발을 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에서 1986년 5월 이후에 제조된 완전 자동화기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범프 스탱은 ‘완전 자동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연방 법률상 합법적인 거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을 계기로 매사추세츠 주가 지난 1일부터 범프 스탱의 소유를 완전히 금지했으며 뉴

저지, 켈리포니아 등 주요 도시도 여기에 동참했다. 켈리포니아 주는 그 전부터 판매를 금지해왔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특히 대표적인 총기 옹호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마저 라스베이거스 사건 직후 범프 스탱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여기에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까지 터지면서 ‘총기 단체를 옹호한다’는 비판 여론의 압박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범프 스탱 규제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을 느슨한 총기규제보다는 총격범의 ‘정신 건강’과 같은 개인 문제로 몰았던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플로리다 총격 사건을 “사악한 학살극”이라고 비난하면서 “학교 안전은 우리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 정면돌파에 나섰다.

연합뉴스

<h3>공산면, 대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h3>비금도,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h3>거문도,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h3>중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
---	--	---	--

주인직매 H.010-3605-5000